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판로지원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관련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일부 조항만 수록하였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LSW)의 조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총 칙

(1) 목적(제1조)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중소기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 ②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 국가기관
 - ㉡ 지방자치단체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③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 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⑥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1) 구매 증대(제4조)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하기 (3) 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100억원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제5조)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①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상기 ①, ④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제6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경쟁제품의 계약방법(제7조)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②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공동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②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④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제7조의2)

- ① 공공기관의 장은 (4)의 ①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4)의 ①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 ㉡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6) 경쟁입찰 참여자격(제8조)

- ① (4)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자격의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 ㉔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㉕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③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상기 ③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⑤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7)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제8조의2)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㉒ 대기업(분할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㉓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 등을 하였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중소기업
 - ㉔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 ㉕ 정당한 사유 없이 ③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조사를 거부한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②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중소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②에 따라 ①의 ㉑ 및 ㉔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상기 ①의 ㉑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①의 ㉑에서 ㉓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경우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상기 ⑥에 따른 인정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8)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제8조의3)

- ① 공공기관의 장은 (4)의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견기업의 참여는 그 규모나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견기업은 ①에 모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참여자격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②에 따라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기업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참여자격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 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②에 따라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기업이 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거나 (6)의 ③의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②부터 ④까지에 따른 확인·조사 및 확인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⑥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에 관하여는 (4)의 ②·④ 및 ⑤, (7) ①·③·⑤부터 ⑦까지, (9)부터 (11)까지, 5.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에서 (3) 및 (5), 9. 벌칙의 (1) 및 (2)를 준용한다.

(9) 직접생산의 확인 등(제9조)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④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③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11) ②의 각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 ⑤ 상기 ④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상기 ④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 ㉢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⑥ 상기 ④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 ㉠ 상호가 변경된 경우
 - ㉡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 ⑦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0)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10조)

- ① 상기 (9)의 ④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1)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제11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의 ④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 ㉡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9)의 ②에 따른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 ㉤ 상기 (9)의 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②의 ㉠·㉢ 및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②의 ㉡ 및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상기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
 - ㉠ 상기 ②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1년
 - ㉡ 상기 ②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6개월
 - ㉢ 상기 ②의 ㉢ 및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 ㉣ 상기 ②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이내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방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상기 ②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⑧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②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과징금(제11조의2)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7) ①의 ㉠ 및 ㉡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 ㉡ 상기 (11)에서 ②의 ㉠ 및 ㉢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상기 ①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제12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②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1)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13조)

-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상기 ②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상기 ④에 따른 사전 수요 검토, 중소기업 참여방안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13조의2)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상기 (1) ②에 따른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필요한 지원
 - ㉡ 하기 (3) ②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홍보
 -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한 자문 및 협의
 - ㉣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업무
- ②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제14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제14조의2)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기준, 공공기관의 참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제14조의3)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이하 “시범구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11)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보험료를 우대 등의 지원
 - ㉡ 시범구매제품 중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정책자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 ②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구매제품을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시범구매제품의 원활한 구매·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및 인증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상기 ③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제14조의4)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성능·기술 검증이 필요한 제품(이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 성능·기술 검증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성능·기술 검증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상기 ①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4조의5)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③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제15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상기 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0)의 ①에서 ㉠에 해당하여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③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상기 ③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④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③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⑦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시험연구원은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⑧ 성능인증의 절차, 성능인증 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9)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제16조)

상기 (8)의 ①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 성능인증의 취소 등(제17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능인증업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 ㉡ (8)의 ⑧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험연구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의 ⑥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인증 업무를 한 경우
 - ㉢ (8)의 ⑧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인증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이나 ②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성능인증업체나 시험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문서로 내도록 할 수 있다.
- ④ 성능인증업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8)의 ③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다.
 - ㉠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 (8)의 ③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 ㉢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 ㉣ 인증서의 분실·훼손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성능보험사업의 실시(제18조)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의 ①에 따른 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 「보험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 ㉡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
- ② 상기 ①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연구원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12)에 따라 정부가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2)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제19조)

-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8)의 ⑥에 따라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으로부터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11)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상기 ①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절차,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제20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상기 ①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결과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①에 따라 결정된 원가계산 결과를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다.

4.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1)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제20조의2)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부품 산업 육성,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위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을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를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 ㉡ 중소기업제품의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 ㉢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받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 ㉣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를 금지하여야 한다.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에 따라 상생협력이 실패 또는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 ㉢ 상기 ②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을 포기한 경우
 - ㉣ 그 밖에 ②에 따른 상생협력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수행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제20조의3)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 산업 육성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공공조달시장에서 특정 업체로의 편중 해소 등을 위하여 입찰 참여자격을 (1)의 ②의 지원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은 (1)의 ②에 따라 선정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한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 중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과 그 제품의 주요 소재·부품을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고, 지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의 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원산지 및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납품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 업체는 소재·부품에 관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상기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여자격 제한 및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

(1)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제21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2)의 ③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상기 ①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상기 ②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②에 따른 권고를 할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를 하는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입찰절차 중지 기간 중에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와 입찰절차 중지 명령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2)의 ③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실적과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 관련 기업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⑦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의 (2) ① 후단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⑧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4.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2)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하여 생산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제품 등의 구매실적을 다음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제22조)

상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의 (1)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을 제조·수리·시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인도(이하 이 조에서 “납품”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원사업자”라 한다)가 납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 ③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3)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제23조)

- ①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요구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①에 따른 제품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제24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 확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25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 중소기업자의 제품의 생산·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및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체 보유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1) 판로지원사업(제26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 ㉡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 ㉢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 ㉤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해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 ㉧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②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제(26조의2)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③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시행(제27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1)의 ②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연계생산지원사업 등(제28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수주·발주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판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공동상표 개발 비용
 - ㉡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과 그 운영자금
 - ㉢ 공동상표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 ㉣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출
 - ㉤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홍보
 - ㉥ 그 밖에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 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항

(5) 물류현대화사업 지원(제29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에 대한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사업과 이에 딸린 사업 등 물류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상기 ①에 따른 물류현대화사업의 지원내용은 자금지원, 지도·연수 및 정보제공 등으로 한다.

(6)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지원(제30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음의 중소기업자 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 ㉡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 ㉢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의 ㉢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1)의 ②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는 상기 ①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나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③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상기 ①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나 품목의 지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31조(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공표)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동향을 분석·공표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분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분석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7.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지원

(1) 공공기관의 책무(제31조의2)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제31조의3)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그 밖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판매회사 내에 설치한다.
-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소 제조업체 또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소모성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 본다.

(3) 실태조사(제31조의4)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8. 보 칙

(1) 보고와 검사 등(제32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 공공기관의 장
 -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
 - ㉢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자
 - ㉣ 시험연구원의 장 및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의 장
 - ㉤ 성능보험사업자
 - ㉥ 원사업자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을 수행하도록 지원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장
- ② 상기 ①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제33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 ㉠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 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 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

(3)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8조 제2항,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㉑ ②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임원과 직원
 - ㉒ 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7)에 따른 전담기관에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9. 벌 칙

(1) 벌칙(제35조)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7)의 ㉑, ㉒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 ㉒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에서 (8)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
- ② 상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11)의 ②에서 ㉑, ㉒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상기 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에서 (8)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제36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8. 보칙의 (1)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제37조)

- ① 상기 8. 보칙의 (1)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①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벤처투자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관련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일부 조항만 수록하였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LSW)의 조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총 칙

(1) 목적(제1조)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 ㉣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 ② “벤처투자”란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 ④ “초기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를 말한다.
- 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⑥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⑦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⑧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⑨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⑪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3) 적용 범위(제3조)

이 법은 벤처투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제4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5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① 벤처투자 산업 육성 및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② 국내외 벤처투자 동향 및 여건 분석
- ③ 벤처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 ④ 전문개인투자자 등 벤처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 ⑤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확대

(6) 실태조사(제6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벤처투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장
 - ㉣ 7.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용의 (1)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장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7)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제7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벤처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1)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①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 ② 개인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 ③ 개인투자자와 중소기업,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교류 지원
- ④ 그 밖에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 ①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상기 ①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상기 ① 및 ②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다.

(3)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 ① 전문개인투자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의 자에게 투자하여야 한다.
 - ㉠ 창업자
 - ㉡ 벤처기업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 그 밖에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상기 ①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1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②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④ 투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3. 개인투자조합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제12조)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개 인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 ㉠ 창업기획자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상기 ①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①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 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 ⑥ 상기 ①부터 ⑤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13조)

- 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상기 ①에도 불구하고 (1)의 ①에서 ㉡ ㉠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①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 ④ 상기 ①부터 ③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3)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제14조)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 ㉡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 게 위탁할 수 있다.

(4)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제(15조)

- ①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재산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 ㉡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5)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제16조)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결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

(6)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제17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 ①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 ③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④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 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7)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 ① 개인투자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 ㉠ 존속기간의 만료
 - ㉡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 ㉢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 ㉣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제36조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② 개인투자조합에 ①의 ㉢ 또는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중 1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거나 (1)의 ①에서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 ③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개인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8)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 ① (7)의 ③에 따른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9) 제20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10) 제21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의 ①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1)의 ②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㉔ (1)의 ③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㉕ (1)의 ④를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㉖ (2)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㉗ (3)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㉘ (4)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

㉙ (5)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㉚ 8. 보칙의 (2)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㉛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①(①의 ㉜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㉝ 경 고

㉞ 주 의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1)의 ① ㉞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①(①의 ㉜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㉟ 면직 또는 해임

㊱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㊲ 경 고

④ 상기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제23조)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창업기획자

(1) 창업기획자의 등록(제24조)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㉟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보육

㊱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㊲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㊳ 상기 ㉟부터 ㊲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상기 ①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는 것

-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민법」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 등”이라 한다)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 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 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2)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13)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의 ② ㉠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하기 (2), (3)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 창업기획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및 상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기 ①부터 ③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제25조)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 사업 모델 개발
- ㉡ 기술 및 제품 개발
- ㉢ 시설 및 장소의 확보
-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3)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제26조)

-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①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 ③ 상기 ① 및 ②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제27조)

-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그 밖에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에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창업기획자는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5) 창업기획자 대주주 등의 행위제한(제28조)

- ① 창업기획자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 등”이라 한다)은 창업기획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창업기획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 창업기획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㉔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창업기획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 ㉕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 등이 ①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 또는 대주주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제29조)

- 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기획자가 ①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②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7)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30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① 창업기획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②에서 같다]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 ③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 ④ 창업기획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 ⑤ 상기 ②부터 ④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②부터 ④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 ⑥ 상기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부터 ⑤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직무 관련 정보를 받은 자

(8)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제31조)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창업기획자의 공시(제32조)

-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 조직과 인력
 - ㉡ 재무와 손익
 -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 ㉣ (6)의 ③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13)의 ①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② 상기 ①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의무의 승계(제33조)

- ① 창업기획자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창업기획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상기 ①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종전의 창업기획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1) 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제34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① (1)의 ①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 ② (12)의 ②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③ (13)의 ①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12)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제35조)

- ① 창업기획자는 (1)의 ①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기획자가 ①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3) 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제36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

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 ㉠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1)의 ㉡, ㉢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 (2)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3)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4)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5)의 ㉠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6. 벤처투자조합 (3)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 ㉧ 하기 ㉡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중소기업부 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상기 ㉠(㉠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창업기획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면직 또는 해임
 - ㉡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 경 고
- ㉩ 상기 ㉠ 및 ㉡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제37조)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창업자에 대한 투자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 ㉥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 ㉧ ㉠부터 ㉦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상기 ①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 ㉡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와 ㉢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만 적용한다.
 -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12)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13)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1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13)의 ② ㉠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 ㉭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
- ③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②의 ㉡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③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⑤ 상기 ①부터 ④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제38조)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1)의 ① ㉠부터 ㉣까지, ㉥ 및 ㉦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①에 따른 투자 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①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 의무 이행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 ③ ① 및 ②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제39조)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①의 ㉡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행위 제한(제40조)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 등”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이 ①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대주주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제41조)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①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②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42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및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②에서 같다)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 ⑤ 상기 ②부터 ④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 ⑥ 상기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직무 관련 정보를 받은 자

(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채 발행(제4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제4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제4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 조직과 인력
 - ㉡ 재무와 손익
 -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 ㉣ 상기 (5) ③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하기 (13) ①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② 상기 ①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의무의 승계)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상기 ①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11) 제4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① (1)의 ①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 ② (12)의 ②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③ (13)의 ①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12) 제4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1)의 ①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①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3) 제4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

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의 ①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1)의 ①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 (1)의 ②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1)의 ②에 ㉠ 후단(㉠)과 ㉡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2) ①에 따라 (1)의 ① ㉠부터 ㉣까지, ㉤ 및 ㉥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3)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4) ①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6. 벤처투자조합 (3)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 ㉨ 6. 벤처투자조합 (14)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경우
- ㉪ ②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①(㉠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 면직 또는 해임
 - ㉡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 경 고
- ③ 상기 ① 및 ②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벤처투자조합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제50조)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4)의 ③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7.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영의 (1)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라 한다)
 - ㉤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 ⑨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기업창업투자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부터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 ㉤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상기 ①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기업창업투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①의 ㉠부터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④ 상기 ③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6. 벤처투자조합 (14)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 ⑦ 상기 ①부터 ⑥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창업투자부령으로 정한다.

(2)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제51조)

- ① 벤처투자조합(7.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용의 (1)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의 ① ㉠부터 ㉣까지, ⑨ 및 ㉤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② 상기 ①에도 불구하고 (1)의 ① ㉠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①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상기 ①의 ㉠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의 ①에 따른다.
-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 ㉠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⑤ 중소기업창업투자부 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기업창업투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 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 ⑥ 상기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제52조)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 ㉡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②의 ㉣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제53조)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할 것
 - ㉡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5)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제54조)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제55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 ①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 ③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④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7) 벤처투자조합의 해산(제56조)

- ① 벤처투자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 ㉠ 존속기간의 만료
 - ㉡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 ㉢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 ㉣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② 벤처투자조합에 ① ㉡ 또는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 ③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벤처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8)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제57조)

- ① (7)의 ③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9)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제58조)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10)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제59조)

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60조)

- ① 벤처투자조합은 건전한 벤처투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출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행위
 - ㉡ 출자자에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고 제공하는 행위
- ②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는 ①의 행위를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청해서

는 아니 된다.

(12)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 ㉡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상기 ①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의 ①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1)의 ②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 (2)를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3)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 ㉤ (4)의 ①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관리한 경우
 - ㉥ (5)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6. 벤처투자조합 (14)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8. 보칙의 (2)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①(㉠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 시정명령
 - ㉢ 경 고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①(㉠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벤처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면직 또는 해임
 - ㉡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 경 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②의 각 조치 또는 ③의 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제63조)

- ① 공모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80조,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 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86조, 제218조, 제219조,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1조까지, 제244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중소기업투자사업부 장관은 공모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벤처투자조합은 (1) ④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공모벤처투자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3) ①·② 또는 6. 벤처투자조합 (13)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중소기업투자사업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투자사업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투자사업부 장관은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5)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제6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로 본다.

(16)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제65조)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용

(1)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제66조)

- 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 ② 상기 ①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목적
 - ㉡ 명 칭
 - ㉢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임직원에 관한 사항
 - ㉦ 이사회에 관한 사항
 -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제67조)

- ① 한국벤처투자는 (1) 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 (5) 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 ㉢ 벤처투자
 - ㉣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 ㉤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 ㉦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한국벤처투자는 ①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①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3)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제68조)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4)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제69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제70조)

-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 ㉠ 개인투자조합
 - ㉡ 벤처투자조합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3. 개인투자조합(2)의 ① 및 ②, 6. 벤처투자조합(1)의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8. 보 칙

(1) 기금의 투자 등(제71조)

-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 벤처투자조합
- ㉡ 모태조합
-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의 자료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개인투자조합
- ㉡ 벤처투자조합
- ㉢ 창업기획자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벤처투자조합
- ㉥ 한국벤처투자
- ㉦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투자 의무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업무의 집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관련 정보 이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그 밖에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②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일시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기 ②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자료제출(제73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업무기준의 고시(제74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청문(제75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 권한의 위임·위탁 등(제76조)

-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부 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77조)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9. 벌 칙

(1) 벌칙(제78조)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 창업기획자 (5)의 ① 또는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4)의 ①을 위반하여 대주주 등 자신의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 4. 창업기획자 (7) 또는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6)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 ㉢ 6. 벤처투자조합 (3)의 ②에서 ㉠을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④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 ㉡ 7.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용 (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양벌규정(제79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제80조)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자
 - ㉢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8. 보칙 (6)을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상기 ①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 관련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일부 조항만 수록하였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LSW)의 조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총 칙

(1) 목적(제1조)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제2조)

-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상기 ①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소상공인의 책무(제4조)

-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소상공인 주간(제6조)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일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2.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1)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제7조)

-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제8조)

-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상기 ①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④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제9조)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사람이 된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 소상공인,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 ⑥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상기 ①부터 ⑥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⑤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및 ⑥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1) 창업촉진 및 성장(제11조)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인력 확보의 지원(제12조)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직무능력 향상 지원(제13조)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판로의 확보(제14조)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디지털화 지원(제15조)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물,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혁신의 촉진(제16조)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사업장 환경의 개선(제17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국제화 촉진(제18조)

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의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9)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제19조)

-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20조(업종별 지원)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1) 제2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2) 제22조(구조고도화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상공인 보호 시책

(1) 경영안정의 지원(제23조)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제24조)

-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제25조)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공제제도의 확립(제26조)

-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제27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사업 영역의 보호(제28조)

-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장소·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제29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8)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제30조)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제31조(조세의 감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5.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1)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제32조)

- ①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①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제3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제34조)

-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상기 ①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지원기관의 설치(제35조)

-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6. 보 칙

(1)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제36조)

- ①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②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 ㉠ 상시 근로자 수
 - ㉡ 매출액
 - ㉢ 자산총액
- ④ 상기 ② 및 ③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과태료(제37조)

- ①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1)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상기 ①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